

의정소식

구민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심 없이 발로 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해변의 추억(장원영,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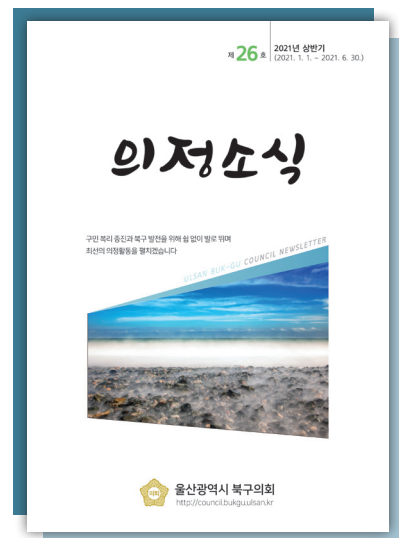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제193회 임시회
제194회 임시회
제195회 제1차 정례회
- 11 주요 안건처리 현황
- 16 현장 속으로
- 23 결의안, 건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 42 2021년 상반기 포토의정



표지설명 | 파도와 몽돌
(이경호,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발행일 | 2021년 상반기, 제26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3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다짐하며 힘차게 시작한 신축년 새해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 들어 울산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보건 당국의 노력과 함께 구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백신 접종과 방역에 매진한 결과 현재는 그 수가 감소하여 많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작은 방심은 우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모두 인내심을 갖고 백신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에 계속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일상이지만 그간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우리 북구의회도 항상 구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3년 전 구민의 크나 큰 지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7대 북구의회의 임기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쉼 틈 없는 의정활동 달음질 속에 어느덧 1년 남짓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의회는 생활정치의 일선에서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구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오로지 구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발간사를 마치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임 채 오**

제7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장



성 명 임 채 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구민이 최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의장



성 명 이 정 민
연락처 010-3123-3387
선거구 농소 2·3동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이 진 복
연락처 010-4228-8986
선거구 비례대표

구민의 이익을 지키며, 겸손하고 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원



성 명 이 주 언
연락처 010-9173-443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든든한 의정활동을 펼쳐 기본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 명 정 치 락
연락처 010-3863-8980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정치꾼이 아닌 이웃을 위한 구의원으로서
단디 하겠습니다.

의원



성 명 정 외 경
연락처 010-6625-7725
선거구 농소 2·3동

초심, 열심, 지심으로 더 많은 행복을
만드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성 명 임 수 필
연락처 010-6227-0049
선거구 농소 2·3동

노동자 서민의 직접 참여정치가
희망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 명 백 현 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늘 그랬듯이 이웃 같은 구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원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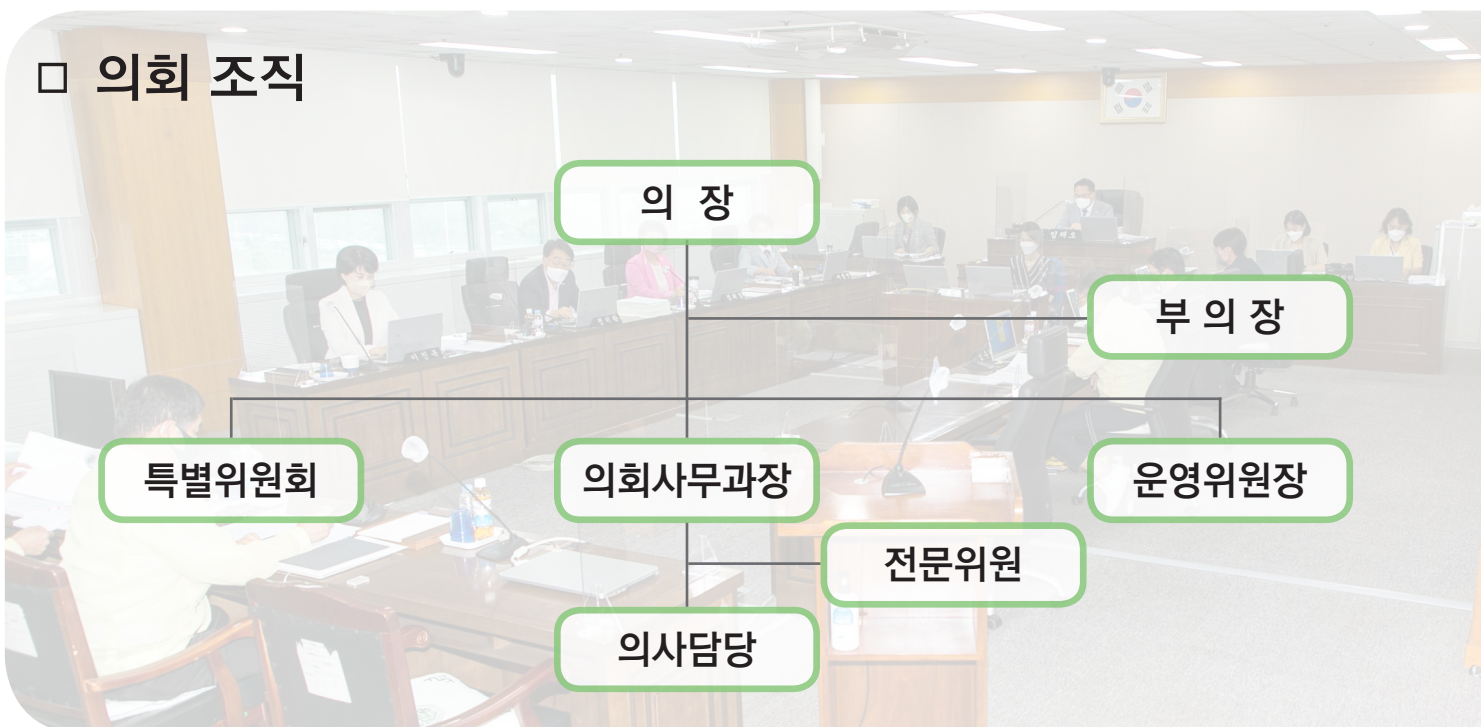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8	2	3	2	1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2020. 1.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20. 4.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의회 조직





회기운영 현황(2021. 1. 1. ~ 6. 30.)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령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21년 상반기	3	44	2	29	1	15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건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93회 (2021.2.17.~3.3.)	15	16	0	0	7	0	1	1	2	0	5
제194회 (2021.4.21.~5.4.)	14	24	1	0	10	2	1	0	2	2	6
제195회 (2021.6.10.~6.24.)	15	33	1	1	15	2	1	0	0	4	9
합 계	44	73	2	1	32	4	3	1	4	6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93회 || 임시회 2021. 2. 17. ~ 3. 3.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3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집행기관인 북구청으로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임채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손발이 될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 취약하다”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취약점들을 적극 발굴, 해소하여 상처받은 민심을 위로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정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채오, 이진복, 이주언, 임수필 의원이 함께 참여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외경 의원은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범사회적 조사단 구성과 함께 북구 주민을 조사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 이어 정치락 의원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임수필 의원이 ‘핵발전소 안전대책,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나란히 구정질문에 나섰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94회 || 임시회 2021. 4. 21. ~ 5. 4. (14일간)

울산북구의회가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임채오 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임 의장은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장명촌지구 조합과 조합원, 관련 전문가 및 북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북구청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시공사 부도 후 24년이 흐른 지금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서 “사업 정상화만이 주민들의 희망이며 살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백현조 의원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구정질문에 나서 이동권 구청장을 상대로 이 구획정리사업의 계획 결정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묻고, 인허가권자인 울산시와 관리감독자로서 북구의 정확한 역할 분담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이주언 의원이 ‘관내 경로당을 입식경로당으로 전환하자’를 주제로, 임수필 의원이 ‘농소3동 천마산 등산로를 지켜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정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주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임수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95회 || 제1차 정례회 2021. 6. 10. ~ 6. 24. (15일간)

울산북구의회는 6월 10일 본회의장에서 195회 1차 정례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15일간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임채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집행 실적과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불용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임수필 의원이 ‘울산 북구 농소2동에 파출소가 설립돼야 한다’를 주제로, 이진복 의원이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산의 문제점은 개선·보완돼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11일 개최한 2차 본회의에서는 정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14일부터 22일까지는 7차례에 걸쳐 각 실, 국, 과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23일에는 현장방문활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당사현대차오션캠핑장 등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24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 심의 의결했다.

제193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이진복 의원 외 7명]

*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임채오 의원 외 7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의 대행사무 범위 등을 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주연 의원 외 1명]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외 2명]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내 북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사업 추진을 체계화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북구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에 따라 ‘평생교육센터’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평생교육센터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강료 · 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함.

●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정외경 의원 외 4명]

*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범사회적 조사단 구성과 울산 북구민을 조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함.

제194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

●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정외경 의원 외 7명]

*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이주언 의원 외 7명]

*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원안가결 [임수필 의원 외 7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로 우리 구 치안 관련 소관 경찰서가 변경됨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규정 등을 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중·장년층(45세~64세 이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등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함.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개관 예정에 따라 운영과 관련한 캠핑장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시키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음.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임채오 의원 외 7명]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 및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함.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승인 함.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정외경 의원 외 7명]

*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행정 수요에 따른 업무 신설 및 부서명 변경 등 행정기구를 조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보건소를 분과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함.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울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효문동과 양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공직자윤리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 및 수수료 항목의 삭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종과세율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 *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구성 및 위원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 원안가결

- *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구군 협의사항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확대 보급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북부경찰서 개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견을 청취함.

●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정외경 의원 외 7명]

* 농소2동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파출소 설립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농소2동에 파출소를 설립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함.



설맞이 북구지역 아동센터 격려



울산북구의회가 설을 앞두고 북구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북구의회는 2월 4일 염포동과 정자동의 지역아동시설 2곳을 찾아 격려 성품을 전하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번 격려 방문은 북구의회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진행 중인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활동의 하나다.

먼저 염포동에 위치한 ‘푸른희망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의원들은 시설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사항들을 들은 뒤 시설 이용 어린이들이 읽을 아동용 도서 30여 권을 전달했다.

이어 정자동에 위치한 ‘소망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시설 현황과 애로사항을 들은 의원들은 사무용품과 미술교육도구 등을 전했다.

임채오 의장은 “설을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한편 시설 이용 어린이들을 위한 격려 성품을 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모든 주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테마거리 등 완벽 마무리 주문



울산북구의회가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조성 현장 등을 방문,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의회는 3월 3일 양정자동차 테마거리와 북구 평생학습관 조성 현장을 대상으로 임시회 현장방문 활동에 나섰다.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양정초등학교에서 현대자동차 문화회관까지의 거리에 자동차테마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로등과 벤치 등의 시설물에 자동차디자인을 입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서의 지역성과 상징성을 강조했다.

북구의회는 이어 산업로 1024 일원에 조성된 평생학습관 현장을 찾아 강의실과 실습실, 조리실, 정보화교육장, 대강당 등을 둘러봤다.

임채오 의장은 “주민 편의와 북구 발전을 위해 조성 중인 사업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통시장에서 1분기 방역 봉사활동



울산북구의회 의원들이 1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전통시장 방역에 나섰다.

임채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3월 24일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참가 인원은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면서,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집중 소독했다.

임채오 의장은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해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부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울산북구의회 이정민 부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북구의회 임채오 의장은 5월 24일 의장실에서 개최한 의원 간담회에서 이 부의장에게 협의회가 수여하는 봉사상을 전수했다.

이 부의장은 7대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친근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을 깊이 토론, 연구하면서 의정활동 능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높였으며,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 점도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

이정민 부의장은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의원으로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소2동파출소 신설 위해 주민과 간담회



울산북구의회가 농소2동의 숙원인 파출소 신설과 관련, 주민들로부터 직접 현안을 듣고 설립을 위해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함께 발걸음을 맞춰 가기로 했다.

북구의회는 6월 1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 8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김상태 농소2동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파출소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2019년과 2020년 추진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농소2동 파출소의 신설을 위해 주민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 방안을 찾으려고 마련한 자리다.

이에 북구의회는 농소2동파출소 신설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 정부와 유관 기관 등에 전달하고,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임채오 의장은 “농소2동의 인구는 4만명이 넘어 북구 8개동 가운데 가장 많다”면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만큼 파출소 신설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휴가철 앞 강동해변 환경정화봉사



울산북구의회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대규모 휴양객이 몰릴 예정인 강동동 해변에서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북구의회는 6월 23일 산하해변 일원에서 임채오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직원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2분기 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산하해변 곳곳에 방치된 크고 작은 쓰레기들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수거하면서 휴양객들을 맞이할 준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임채오 의장은 “봉사하고 술선수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휴양객들이 천혜의 경관을 가진 강동 해변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 오늘 정화활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 현대차오션캠프 현장방문



울산북구의회가 195회 1차 정례회 현장방문활동 일정으로 6월 23일 호계동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조성 현장을 찾아 현황을 브리핑 받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우선 호계매곡5로6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았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등으로 구성된 이 곳 내부 곳곳을 들여다보면서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사동 508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위치한 당사현대차오션캠프를 찾아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이 곳은 캠핑 사이트 20면에 화장실, 샤워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8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채오 의장은 “공공산후조리원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앞으로 북구를 대표할 시설로 각광받을 것”이라면서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북구의회에서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발 의 자 : 정외경 의원 외 4명
- 의 결 일 : 제193회 임시회(2021. 2. 17.)
- 결의요지 :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 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함.
- 나. 그간 우리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거리상 경주시내 보다 가까이 위치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대책에서 소외되어 왔음.
- 다. 이에,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범사회적 조사단 구성과 울산 북구민을 조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주 문

북구 주민들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과 SNS를 통해 접하고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월성원전 부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노출 우려’,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검출’,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 배수조에서 71만 3천 베크렐 검출’, ‘월성원전 중심부지 300미터 지점에서도 924베크렐 검출로 인하여 원전부지 밖으로 확산 가능성 제기’ 등 한수원의 총체적 부실 관리와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실제 거리상으로 경주시내 보다 더 가까이 위치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2015년 이후 한수원에서 실시한 ‘삼중수소 배출관련 환경영향 및 시민건강 역학 조사’에 우리 구민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2016년에 구 자체예산으로 ‘관내 생활방사선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을 항의 방문하여 삼중수소 인체영향 평가 시에 반드시 북구 주민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9년에 실시한 영향평가에 겨우 150명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다

리고 있다. 또한 작년에 맥스터 건설 관련 주민투표 결과를 포함한 구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라는 요구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내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자체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유해야 함에도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범사회적 조사단을 구성하고 울산 북구민을 조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울산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여부 및 인체영향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향후 유사한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울산 북구에 그 사실을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



- 발 의 자 : 임재오 의원 외 7명
- 의 결 일 : 제194회 임시회(2021. 4. 21.)
- 건의요지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 제안이유

- 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8년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부도가 나면서 24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음.
- 나. 사업 공정률은 87% 수준에 멈춰 있으며, 체비지 취득을 위한 소유권이전문제 및 각종 폐기물 처리 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 시 환지 무효화, 건축물 원상복구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다. 이에, 조합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 및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

■ 주 문

2020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8년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006년 12월, 시공사인 평창토건이 부도가 나면서 24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87% 수준에서 멈추어 있고, 주요 잔여 사업은 명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공사, 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이며,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울산시가 추진하는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사업은 폭 25m 중 울산시가 15m, 조합이 10m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 측이 맡아야 할 구간의 사업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진장명촌지구에는 집단체비지로 조성된 3,000여 가구의 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빌라, 원룸, 상가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 중 평창리비에르아파트는 2013년에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입주민들은 아파트

체비지 취득을 위해 2011년 평창토건과 파산관재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체비지를 등재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하였으나, 조합이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조항이 없어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24년이 지난 오늘도 조합원과 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진장명촌지구의 사업 정상화만이 주민들의 희망이며 살길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구는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 관련 전문가와 북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장명촌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합측과 조합원 간 갈등 해결, 중요사안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 등에 적극 나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발생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미준공 사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령 부분과 자구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요인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국 의회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유사 사례가 있다면 북구 의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 발 의 자 : 정외경 의원 외 7명
- 의 결 일 : 제195회 제1차 정례회(2021. 6. 24.)
- 건의요지 :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 제안이유

- 가. 농소2동은 인구 4만 명으로 울산 북구 최대의 행정동이며 지속 성장하는 지역임에도 농소1파출소에서 인구 8만 명이 거주하는 농소1동과 농소2동 전체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치안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나. 농소2동 주민들은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스스로 대응하고자 자율방범대를 설립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 다. 이에, 향후 증가할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소2동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파출소 설립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농소2동에 파출소를 설립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함.

■ 주 문

농소2동은 2019년도에 인구 4만 명을 돌파하였고 금년 10월부터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과 한양 립스 아파트 1,227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명실공히 북구 최대의 인구 밀집도시로 지속 성장하는 중추도시로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과 치안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2021년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190위인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41,253명보다 더 많은 인구가 농소2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치안 상황은 오히려 더 열악하다. 현재 농소1파출소에서 농소1동과 농소2동 지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곳의 내·외국인 인구를 합치면 2021년 5월 말 현재 총 78,179명에 달한다. 특히, 매곡, 중산, 이화 3개의 산업단지 196개의 업체가 소재하는 농소2동은 도·농·공업 지역이 혼재된 복합신흥도시로 경주시계와도 연결한 지역이다. 또한 국내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밀집 거주하고 있고 7번 국도를 통해 현대 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물류차량과 출퇴근 차량의 이동이 많아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할구역과 우범지역 또한 지형적 특성에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 따라 각종 민생치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0년에 북부경찰서가 개서되었지만, 농소1파출소 관할 경찰인력은 오히려 2명이 줄었으며, 8만 여 명이 거주하는 농소1·2동 전체지역을 관할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이는 이 지역 치안이 확대되고 5대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경찰인력 증원은 물론 파출소 분리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소2동 주민들은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스스로 대응하고자 2020년에 자율방범대를 설립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농소2동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파출소 설립을 요구하였지만, 파출소 설립 심사 요건 중 인구를 제외한 면적, 112신고 건수, 5대 범죄 건수가 미달한다는 사유로 경찰청 심사에서 2번 탈락하였다.

농소2동은 증가하는 인구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치안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소2동을 관할하고 있는 농소1파출소는 농소1동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만성적 정체 구간인 국도7호선을 거쳐야만 출동이 가능하다. 호계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막 막한 교통정체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파출소 설립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의 심사기준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야만 파출소 설립이 가능한 사후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후악방문'의 기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청은 치안과 강력범죄 예방, 주민안전, 안심 돌봄 등 광범위한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 설립 심사기준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

지난 3월, 농소2동 파출소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파출소 설립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목표치 1만 명을 상회하는 1만4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하니 농소2동 주민들의 파출소 설립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농소2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농소2동 파출소 설립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찰청과 소관 부처에서는 농소2동 파출소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Q. 향후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시 지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우리 북구만이라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지급 중인 울산형 재난지원금에 43억원의 구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동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울산형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다자녀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은 아동 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하였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과 9월에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60만원씩, 102억원의 국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미취학 아동에게는 시비로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1월에 지급 완료하였고, 2월에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취학 아동과 학생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다자녀가정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Q. 다자녀 가족의 경우 일반 승용차는 가족 모두가 편하게 탈 수가 없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도시로서,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적정 승차정원 이상 차량을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면, 다자녀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현대자동차와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서 다인승 차량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현대자동차와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다자녀가구를 위한 협력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 공급 및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타 지자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젊은 도시 북구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다자녀 가구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시에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저출생 극복 사업으로, 우리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혼인기간 10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였고,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9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각종 시설이용료 감면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첫째자녀 6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출산 축하용품 지원입니다. 종전에 첫째자녀 출산 가정에만 지급하던 강동 돌미역과 지역 한우로 구성된 지역특산품을 올해는 다자녀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출산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인 승합차 취득세 할인 혜택, 상·하수도 요금감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에 대해서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행사에서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 복구에 살면서 셋째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학부모의 말씀을 듣고, 저를 포함해서 행사에 참석한 의원님들도 환호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복구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 질문의원 : 임수필 의원
- 질문일시 : 제193회 임시회(2021. 2. 17.)
- 질문요지 : 핵발전소 안전대책,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핵발전소 안전대책,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Q. 그동안 핵발전소 안전대책에서 변방으로 지내 온 북구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계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북구청장의 소견과 앞으로의 대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먼저 우리 구는 그간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소외를 당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원전정책에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원전정책에 있어 발전소 인근 지역을 배제하지 말 것을 수없이 요구하여 왔으며, 2019년에는 울산지역 울주군을 제외한 4개구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의향서를 정부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간 많은 요구로 2020년 2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울산 북구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우리 구와 동일하게 원전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전국의 원전 인근지역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고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전동맹은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현재는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전국원전동맹 임시회에서는 16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해 원전인근지역동맹을 통해 항의할 것을 결정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수의 무려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정부기관과 사업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원전정책에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항에도 제시하였듯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방사능방재 장비 확충, 주민행동요령 교육, 방사능방재 훈련 등 다양하고 폭넓게 비상상황을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매년 제고하여,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한수원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자료공유를 요구할 예정이며, 한수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조사에 복구를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내 방사선측정 용역을 시행하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현행법상 월성원전의 소재지가 아니란 이유로 많은 정책과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왔고, 행정력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전동맹 및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률제·개정을 요구하고,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권리 또한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복구 주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방안으로 공무원 기후위기 교육, 전담 공무원 육성, 쓰레기 줄이기, 각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북구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구는 향후 5년간의 기후변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울산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도시, 기후친화 환경도시, 기후적응 복지도시,

자연재해 안전도시를 목표로 6개 부분, 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사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기오염 관련 질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변화로 인한 농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농어촌 환경 개선,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기온상승으로 인한 용수 부족, 홍수로 인한 하천 제방과 시설물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급수 시설과 하천제방의 유지 관리, 노후 하수도의 시설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위험 증가와 산사태 등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대비 시설물 정기점검, 풍수해보험 지원, 산림재해 예방 강화, 가축피해 예방 강화, 시설원에 기후 피해 저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자원 육성,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여섯째, 올해 5월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후위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생의 기후 환경의식을 높이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담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직위를 지정하거나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광명시와 전주시에서는 에너지센터를 건립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향후 에너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먼저 타 시·도에서 운영중인 에너지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2020년부터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원과 연계하여 시민교육, 강사 양성교육, 시민단체와 에너지전환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연구 및 정책개발, 에너지 보급 및 지원, 교육홍보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에너지센터의 설립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센터 설립에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관내 업체 현황과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공과금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리 구 자체적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업체 수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인원으로 추정하여 7천 370개소이며, 이는 관내 소상공인(9,488)의 77.8%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공설시장 사용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며, 공유재산 81건에 대해 1억 8천 1백만원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또 연면적 1,000㎡이상 건축주에게는 착한 임대료 동참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착한 임대료 동참 운동을 전개하여 86개 점포, 39명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지난 일 년 동안 북구에서 폐업한 소상공인 현황과 지금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나 울산광역시 지원 대책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국세통계 폐업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2019년 2천 631개소로 전년대비 폐업율이 3.7%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중에서 운영중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 휴업한 점포에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2020. 8. 16.이후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 철거비용 최대 200만원, 직업정보 탐색교육과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업종전환과 창업 시 사업비 최대 1천만원 등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시와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이 창업, 폐업, 업종전환 시에 상권분석, 마케팅, 점포관리 등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아직은 가입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도 울산광역시도 북구청도 노력해야 합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분위별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1인 영세 소상공인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할 경우,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영세 사업주의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고자 2018년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영업자 기준보수 4등급까지 고용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였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올해부터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의 재정 여건과 울산 구·군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정부, 울산시, 타 구·군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Q.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결정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인허가권자인 울산시와 관리감독자로서 북구의 정확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5월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이 결정되어 같은 해 울산광역시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사업이 시행되던 중 2006년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인해 사업비가 원활히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의 최종 파산이 확정되었고 조합파산에 따른 사업장 관리의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 북구는 매년 1억원 정도의 긴급복구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한하여 정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와 북구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 변경,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 조합에 대한 사업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구는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 정관, 사업계획 등 업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자료제출 등 업무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진장동 등기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를 목표하고 있지만 조합원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중요사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조합원 명부가 정리되고 있는지 북구에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가 나서서 조합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조합원 명부 관리는 조합 고유의 사무로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제47조에 따라 토지소유

권 변경 시 조합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하여 조합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조합 총회를 위한 조합의 협조요구가 있을 시, 총회사실 대외홍보, 장소대여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총회 개최 등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현재까지 경과를 보면 북구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뚜렷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까지 보이는데, 본 의원은 북구가 한 발짝 나아가 T/F팀 구성이나 전담 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공정에 필요한 사업비가 과다하고 조합원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런 사실들도 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해결방안과 자구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는 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조합의 총회 결과,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T/F팀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별도조직에 대한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Q.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 파산 선고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의 임원개선 명령 등 행정지도와 감독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는데, 조합에 대해 북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조합 파산 이후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북구는 임원개선명령 등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나, 조합의 사무인력 및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 개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각종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시 사법기관 고발이 가능하나 처분명령 미 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이 벌금 50만원 이하로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Q. 본 의원이 집행부에 알아본 바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산재한 생활폐기물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면도로 및 공원부지에 적체된 산업, 건축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 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북구가 방치된 산업, 건축 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변 및 인도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저감을 위하여 불법투기행위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폐기물 임시보관장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조합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처리주체인 조합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조합의 파산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에서 조합에 폐기물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조합은 현재는 파산으로 어려우나 사업이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환경부에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건설폐기물을 방치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및 처리 시 국비지원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해놓은 상태이며, 환경부 답변에 따라 처리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우리 구에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장명촌지구, 호수지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법 적용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파악,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북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현재 진장명촌지구, 호수지구 2개소가 있으며, 2개 사업 모두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 민간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합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을 득하여 시행된 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사업 재개 방안, 자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조합 스스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미 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 있어 특별법 제정 등의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되어지며,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조합원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 관련 상생 방안 및 지역 먹거리 브랜드 홍보 전략 제고와 관련하여

Q. 농촌 지역에 택지 및 도시 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북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축산농가와 가까운 거리에 호반베르디움, 한양수자인 등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건축되면서 2019년부터 우리 구에 축사악취와 관련하여 매년 7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는 소외감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 입주민은 악취로 인한 생활여건 악화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는 도로변 투명 차폐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축사 소유주에게는 악취저감 효과가 입증된 바닥처리 미생물제와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우선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에 대한 시설점검 및 악취검사를 30여회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악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피해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여 순찰 및 민원을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사항이 없는 축사를 강제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 또한 보호하여야 하므로, 향후 개발제한지역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있을 경우 축산 농가의 수용 여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Q. 이와 관련하여 축사 폐업, 이전 및 신축에 관한 장려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나아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집단 사육 특구지역 지정과 이 지역에 퇴직자나 이농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각종 규제 및 조례 등으로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업 생산기반의 악화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축사 폐업과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하여 이전에 따른 개별적인 보상을 받아 이전 및 신축함으로써 추가로 재정적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축인허가, 가축사육 허가 등 행정적 사항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축산업 장려대책으로 매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집단 사육 특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대규모 부지 및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주변지역 민원발생,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집단사육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후보지 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Q. 지역 축산 브랜드 '무룡산영한우'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북구의 전략과 추진 계획,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무룡산 영한우는 북구 송정, 시례, 달천동 등 북구 일대 18개 농가에서 8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되는 한우는 가천린포크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룡산 영한우 브랜드 지원을 위해 2013년 국비 1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북구 가대동에 한우공동판매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물 공동판매장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한우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Q. 우리 북구의 대표 먹거리 ‘무릉산영한우’, ‘강동참자미’ 등과 연계한 북구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북구의 입장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구는 올해 농업 전반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북구 농업 특구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산·유통·먹거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단지 또는 더 나아가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큰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흩어져 있는 지역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도심 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복합유통센터 건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하여 우리 북구가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문

- 질문의원 : 정치락 의원
- 질문일시 : 2021. 2. 18.
- 질문요지 : 신설 역사(가칭 송정역)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신설 역사(가칭 송정역)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Q. 의견 수렴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접수는 편의성은 있지만, 이 지역에 몇 대에 걸쳐 대대로 살아온 어르신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북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Q. 스토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지명의 스토리와 역사가 있고, 달천철장 역사와도 맥이 닿아 있는 유서 깊은 ‘호계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명칭은 지명을 따라 부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설 역명을 ‘호계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역명은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의거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출하고 국토부 산하 역명심의회위원회에서 역명을 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 우리구로 역명 제정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우리 구는 이 절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1. 29.(금) ~ 2. 15.(월)까지 공고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의견 제출 방법을 홈페이지, 모바일, 전화, 우편 등으로 다양화하여 의견 제출에 제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수렴된 주민의견을 수치로 객관화하여 주관적 의견 표명 없이 지명위원회(민원지적과 소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동(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참고로 역명의 제·개정 기준에 의거하여 역사적, 문화적 관점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역명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지명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입식경로당으로 전환하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의 경우, 2017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였으며, 2021년 2월 기준으로는 8.4%(18,300명)로 현재까지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제2의 생활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내 경로당은 현재 137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 6,000여명으로 파악됩니다.

경로당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들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대표 공간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연령대가 70대 이상이라는 점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이 공간에서 보내신다는 점 그리고 마을과 아파트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로당은 노인복지 인프라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의 대부분이 사랑방 형식의 좌식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무릎과 허리가 약한 회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좌식 생활로 인한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쓰는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을 구해 설치한 경로당도 일부 있지만 이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 새로 건립된 아파트 경로당과 화청경로당, 대리경로당 조차 예전 방식 그대로 좌식 경로당을 기본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식좌석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음식점을 찾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지자체도 많습디만, 경로당을 입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 의자와 테이블이 부족하여 서 계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한, 종이접기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상을

펴놓고 진행하니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체조 프로그램을 할 때 중간 중간 의자에서 쉬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시간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4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은 수개월 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으로 경로당을 오픈하기 전에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주시와 김포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재를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의 작고, 소소한 불편과 번거로움을 없애고 살피드리는 것은 후손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이며, 진정한 의미의 복지마인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노인 복지환경 조성과 실버케어센터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제3대학 운영, 경로당 조성 등 다양한 노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입식 경로당 전환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인친화도시 복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농소3동 천마산 등산로를 지켜야 한다

농소3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천마산 등산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명분아래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산로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전임시기 울산시가 허가권을 가고 있었지만 현직 지역 의원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주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데에는 천마산, 강동 산하해변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등산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천마산과 농소3동 주민들을 단절시키는 공단 개발은 주거권과 경관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류지와 완충녹지, 등산로를 보존해야 합니다.

농소3동은 달천공단이 마을 안쪽에 있어도 아파트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푸른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공단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 왔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는 그 완충지대인 산과 숲을 없애고 공장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예로 도로보다 높게 조성된 공장부지 위에 지어질 공장의 모습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관이 될 것입니다.

천마산 등산로에서 만난 농소3동 주민들은 매일, 주말마다 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산이라도 올라 힐링할 수 있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퇴직 후 사회관계가 일부 끊기고 일자리를 얻지 못할 때 산에 가는 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우며 삶의 낙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4월이면 나무 심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숲을 가꾸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산이 숲을 이루는 데는 100년이 필요하지만 포크레인 한 대가 휘젓고 다니면 몇 시간 만에 산과 숲이 황폐해 집니다.

한 쪽에선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인공저수지를 만드는 데 다른 쪽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를 메꾸는 개발행위허가에 주민들은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번 모바일테크밸리 사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관계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승인과 합의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도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천마산 등산로와 완충녹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면 지역사회의 불신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울산시와 북구에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지역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소3동 지역구 의원인 저나 울산시 및 북구 공무원들은 겸허히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농소3동 주민들 입장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논리로만 일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분노만 키울 따름입니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 북구의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이해관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조건사항 13번째를 보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하여야 하며,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승인 과정에 달천마을 주민들간, 아파트간, 그리고 달천마을과 아파트 간에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중심에 개발업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살피지 못한 행정의 잘못 때문에 달천마을 주민들은 가슴에 한 서린 응어리와 분노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천마산을 가는 등산로와 완충녹지, 저수지 등을 지키려는 농소3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울산시와 북구, 개발업자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민요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관광지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0년 언택트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관광지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 쪽에서는 개발논리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단절시키는 것이 천마산의 진정한 가치를 가꾸어 나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천마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농소3동과 북구를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만들면 만들지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내년에도 봄이 오면 예쁘게 핀 진달래를 천마산 등산로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95회 제1차 정례회(2021. 6. 10.)
- 발언요지 : 울산 북구 농소2동에 파출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울산 북구 농소2동에 파출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먼저, 그동안 파출소 신설을 위해 추진위를 만들고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 농소2동 주민자치회 김상태 회장님을 비롯한 파출소추진위 분들과 자생단체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소2동 주민들은 앞서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파출소 신설을 요청했는데 두 번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주민들의 힘을 모아 농소2동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국방, 외교, 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각종 범죄나 사기,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북구 인구는 현재 22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 평균연령은 37.8세이며, 아파트와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고, 현대자동차와 부품 협력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2동에는 매곡, 중산, 이화 산단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 유입도 근래 대폭 증가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에일린의 딸 3차 851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웬만한 지방의 군 인구보다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소2동에는 파출소가 없어 변화하는 도시기반과 인구유입에 치안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북부경찰서 유치는 치안 및 경찰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북부경찰서가 몸통이라면 실질적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파출소가 주민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농소1파출소에서 농소1동과 농소2동 치안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부경찰서가 생기면서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7번 국도에 차량이 막히거나 파출소가 있는 농소1동에 호계장이 서는 날에는 농소2동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의 부족한 학교 때문에 지역학생들이 농소1동과 농소3동에 있는 학교로 갈 수 밖에 없어 등하교 시 길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울산의 관문이다 보니 교통편도 불편하고 안전한 등하교길, 안심 귀가길에 대한 요구도 많은 실정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령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매곡 지역은 매곡천을 사이에 두고 농소1동과 농소2동으로 나뉘는데 농소1동 매곡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농소2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이 4만을 훨씬 넘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치안 및 행정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주민자치위가 중심이 되어 농소2동 자율방범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파출소 신설에 새로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파출소 신설 1차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인구 △면적 △112신고 건수 △5대 범죄 발생 중 3가지 이상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는 데 농소2동의 경우 인구를 빼 나머지가 모두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심사기준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후에만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규모 신도시·공업지구 개발로 급격하게 치안수요가 증가하거나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치안 외 취약계층 복지, 안전, 안심 돌봄 등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신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만 여명의 농소2동 주민들은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도 발대식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한 만큼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도 농소2동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95회 제1차 정례회(2021. 6. 10.)
- 발언요지 :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산의 문제점은 개선 · 보완되어야 한다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산의 문제점은 개선 · 보완되어야 한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작한 의정 활동이 벌써 3년을 넘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결산과 결산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어떤 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살피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따져봐야 하지만 예산 심의에 비해 그 중요도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예산이란 계획만 한 것이지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더 세밀하고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에 대한 분석이 예산 편성과 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면에서 결산 심사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산검사의견서의 권고 사항이 유사합니다.

금액과 건수만 다를 뿐 매년 예산 전용이나 이용, 불납 결손액, 과다 이월금,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매년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 하였으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특정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요청 드립니다.

결산 검사 시 보조금 반납명세서의 국 · 시비 누락 등 10개 부서에서 많은 건이 수정되었습니다.

오류내용을 보면 이전 회계연도 결산 시 포함된 금액의 이중 기재, 반납 누락, 국 · 시비 반납금액 오기재, 미반납금액의 반납 또는 반납금액의 미반납, 반환일자 및 정산일자의 오류, 정산 지연 등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금액과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러한 오류들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산여부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납부기한 내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한을 경과하거나 이중반납 또는 미반납 등이 발생한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이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역할중 하나는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로잡아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들 대부분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에서 자동생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 행정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결산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전까지 이런 오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였는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나 제안은 해 보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빠른 시간 내 개선해야 할 것이며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자료 제출 전에 관계공무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이 단순히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지적사항을 개선, 보완해야만 예산이 바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회계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정치락 의원
- 발언일시 : 제195회 제1차 정례회(2021. 6. 24.)
- 발언요지 :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저는 오늘 우리 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에도 묵묵히 각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지만, 2020. 12. 31. 기준 인사혁신처 통계연보(국가공무원 기준)에 따르면 9급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신규공무원들의 의원면직(퇴직)률은 전체 의원면직 인원의 17.7%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낮은 봉급과 경직된 조직사회, 높은 업무강도와 악성민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회사원 등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남다른 봉사정신이 요구되지만, 그에 합당한 물질적 보상은 어려운 만큼 공무원에게 있어 승진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흔히들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사무관으로 퇴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2020년 언론보도(서울신문)에 따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평균 27.9년이 소요되는데, 부처별로 최대 13년 11개월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중 지방공무원의 경우 세종시는 17년 6개월, 전남은 28년 3개월로 지방별로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약 24년 6개월 정도지만, 이 기간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2018년 하반기 변경된 시·구·군 단체장 인사합의 때문입니다.

이 인사합의에 따르면 구·군에 속해 있는 4급 국장급 승진요인에 대해 구·군에서 자체 승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시·구·군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의 경우 5급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7급 이하 공무원도 구청장·군수의 추천만으로 시 전입이 가능하던 것이 현재는 전입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의 전체 공무원 수 대비 5급 공무원 수를 단순비교하면, 시는 약 2,000명 중 5급 이상이 400명 이상으로 5명 당 1명인데 비해 북구는 657명 중 43명으로 15명 당 1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와 인사교류가 막히다보니 같은 울산광역시 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북구 공무원들의 5급 승진 가능성은 시에 비해 1/3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9급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근무지에 따라 승진이 차이가 난다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와 인사교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한번 북구에 발령받으면 퇴직할 때까지 북구에서만 근무함으로써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 울산광역시, 타 구·군 등과도 활발히 인사교류를 해야만 폐쇄적인 조직에 막힌 숨통을 틔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5급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공로연수는 그 대상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실태로는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6급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인사교류와 공로연수 확대는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와 타 구·군과의 공감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서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과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하여 시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95회 제1차 정례회(2021. 6. 24.)
- 발언요지 : CCTV관제원은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CCTV관제원은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북구청 CCTV관제센터가 개소한지 약 9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구의 재난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CCTV를 모니터링 하여 범죄예방의 성과를 내고 있는 관제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지을 때가 왔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도 곧 4년이 되어 갑니다.

북구청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지난해 5개 구·군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올해까지 한 곳도 전환문제가 해결된 곳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구성한 북구청에서 먼저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제원은 모두 2년 이상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파견용역 노동자는 2017년 12월에 전환완료 되었어야 할 직종이지만 우리의 무

관심으로 그들의 권리를 4년간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4년 동안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용이 불안하고 청년실업문제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마치 특혜인양, 불공정인양 왜곡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만든 간접고용방식은 1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고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 불필요한 현장대리인을 두어 듣도 보도 못한 업체에 이윤과 관리비를 주는 등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었으나 아직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실현시키지 않고 있는 우리는 공정성을 앞세워 해태하는 당사자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규직전환이 지체되면서 행정편의주의와 의지박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전에도 부분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3년째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IMF사태를 겪으며 비정규직 문제는 약 20년 넘게 노동시장의 불안요소로 양극화 사회를 낳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관제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에게 공정성을 앞세워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채용하는 것이 공정은 아닙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하여야 한다.” 라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보다 후퇴하는 전환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실업과 공정성의 거대담론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도 아닙니다.

고용불안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북

구 주민이 더욱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들의 결단과 의지를 모아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을 하루빨리 듣고 싶습니다.

저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1 PHOTO Council



농소3동 새해공감토크
(21.02.26)

송정동 새해공감토크
(21.03.03)



양정동 새해공감토크
(21.03.04)

2021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1 PHOTO Council

호계문화체육센터 개관식
(21.03.04)



7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21.03.22)

'호수보다 커피' 개소식
(21.03.25)



2021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1 PHOTO Council



화봉꿈마루길 준공식
(21.03.25)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준공식
(21.03.26)



새마을회 매곡천 환경정화
(21.04.08)

2021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1 PHOTO Council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
(21.04.10)



4.19 정임식 열사 추모행사
(21.04.19)

새마을회장 이취임식
(21.04.19)



2021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1 PHOTO Council



자유총연맹 화봉동방역 동참
(21.05.12)

농소1동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식
(21.05.13)



찾아가는 경로당 행사
(21.05.14)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준공식
(21.05.25)



2021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1 PHOTO Council

농소3동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식
(21.05.31)



농소1동 마을계획단
공유주방 오픈식
(21.06.04)

농소1동 마을계획단 주민설명회
(21.06.04)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식
(21.06.08)

2021년 상반기 포토의정

2021 PHOTO Council



북구평생학습관 개관식
(21.06.10)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자 발대식
(21.06.17)



홈골 감자수확 격려
(21.06.23)

2021년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회 발대식
(21.06.26)



| 북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북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 서비스 내용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접속경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짝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09:00 ~ 18:00(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73 팩스 : 241-8979

호문·양정·염포동	농소2·농소3동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호문·양정·염포동
							
의 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임 채 오	이 정 민	이 진 복	이 주 언	정 치 락	정 외 경	임 수 필	백 현 조
의장실 : 241-8900 010-4844-5405	부의장실 : 241-8910 010-3123-3387	사무실 : 241-8920 010-4228-8986	사무실 : 241-8990 010-9173-4432	사무실 : 241-8960 010-3863-8980	사무실 : 241-8950 010-6625-7725	사무실 : 241-8930 010-6227-0049	사무실 : 241-8940 010-3801-836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 시대를 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